

기업 위기 지자체 불똥...여수 법인지방소득세 66.7% 급감

위기의 여수산단

<하> 전남 주력산업 흔들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전남 산업의 주축이다. 철강·조선과 함께 전남의 3대 주력 산업으로, 관련 기업이 284개에 이르고 종업원만 2만 2500명(2022년 광업·제조업 통계자료, 통계청)이 넘는다.

이 같은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및 중동의 공급과잉에 따른 압박 부진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남도와 여수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도 높게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 2023년 누계 생산액이 84조 1918억 원으로 전년도(99조 4634억 원)에 견줘 15.3%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42조 원 규모로 전년도(50조 원)에 비해 16.0%가 줄었다. 가동률 멈추

전남도, 석화산업 대응추진단 신설 39개 사업에 5조6480억 투입 계획
신산업 유치·노후 산업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도

는 공장이 잇따랐고 이리다보니 설비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지자체에도 불똥이 튀었다.

여수시는 법인지방소득세로 1672억원(2023년)을 거둬들였지만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557억원으로 무려 66.7%나 급감했다. 지방소득세도 무려 58.5%나 감소해 전국에서 이천(69.7%)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다. 돈이 돌지 않으니 빈 상가도 급증해 여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전국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지난해 8월부터 전남도와 여수시 등이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꾸리고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전략 토론회'(11월)와 '석유화학기업 현장 간담회'(12월) 등을 잇따라 추진하며 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전남도는 올 1월 전남조직인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추진단'도 신설했다. 전남도의회도 이광일(민주·여수 1), 주중섭(민주·여수 6) 도의원 등을 중심으로 '전남도 산업단지 지속성장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또 24일부터 이를 간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및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절차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여수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재편과 위기대응을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고부가 산업으로 재편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조성 ▲산업 인

프라 확충 ▲규제개선 등 4개 분야 39개 사업 5조 648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특히 석유화학산업을 친환경·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편(10개 사업 5858억원)하고 각각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제한 정책으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데 따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조성(9개 사업 1조 4225억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해 장치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산단 조성 등도 추진한다.

또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를 확충(12개 사업 3조 6397억원)하고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M&A·환경·관세 면제)하는 방향으로 39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 전략 뿐 아니라 단기 과제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오는 3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키로 하고 국회, 산자부 등을 돌며 신속한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철강산업 피해를 입은 포함시가 지난 2022년 지정된 바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산업 위기대응법(8조)에 따라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수출지원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재직근로자의 교육 훈련 및 실직·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전 지원도 이뤄진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고정비용을 절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하도 건의한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 애로사항 등이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여수 석화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해야"

트럼프2기 관세정책 비상대책회의 철강 등 주력산업 보호 머리 맞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조속한 지정과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라 철강 산업도 영향을 받게 돼 물류비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 지원, 코트라 협력·재외동포청 연계 대체시장 발굴, 중국산 저가 수입철강 공급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른 지역 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내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경제 관련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대응 TF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로 직·간접적인 대미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루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주) 순천공장 ▲광양알루미늄(주) ▲삼미메탈 ▲아시아T&C ▲위세아제강 순천공장 대표 및 관계자들도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트럼프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18일(현지시간)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의 수출량 감소가 자동차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1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직·간접적인 대미수출 감소 등에 미치는 위기 진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루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주) 순천공장 등 철강 기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상호 관세 부과 시 부가가치세, 보조금, 환율 등 비관세 무역장벽 모두를 고려한다고 밝혀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도 높게 전망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에너지 분야, 농축산 및 수산 분야 등 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수출보험료 한도 상향과 함께 송배전 전력 계통 연계,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도 제시했다.

전남도는 회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산업에 대한 단기·중장기적 대책을 추진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우리는 IMF 등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발전해 온 국민으로 현장 목소리를 정부와 도 대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국방부, 사직전공의 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임명

국방부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에게 앞으로 4년 동안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임명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임명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임명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따뜻한 '아보하' 정책
▶1면에서 계속

시는 또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청년이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 나갈 육아 지원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복지 정책 중 하나다.

광주시는 임신부의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임신부가사돌봄서비스,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등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정책을 편다.

광주시의 선도적 양육정책으로 꼽히는 '초등학교 부모 10시 출근제'를 지난해보다 확대한 500건

지원하고,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를 통해 광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 청소·정리 등 가사관리 비용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광주시는 또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주시 대표 틈새 돌봄 사업이기도 한 '손녀돌봄비 지원사업'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 '반값 아침찬'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하남산단, 첨단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간편조식 구매비용 50%를 지원한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알아두면 쓸쓸한 광주시의 복지 정책들이 많다"면서 "시민에게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주는 정책이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